



**MB 대통령 지지율 46.3%, 전월대비 2.8%p ↓**  
**한명숙 대선지지도 2위 도약**  
**“천안함 사건 지방선거 영향 없을 것” 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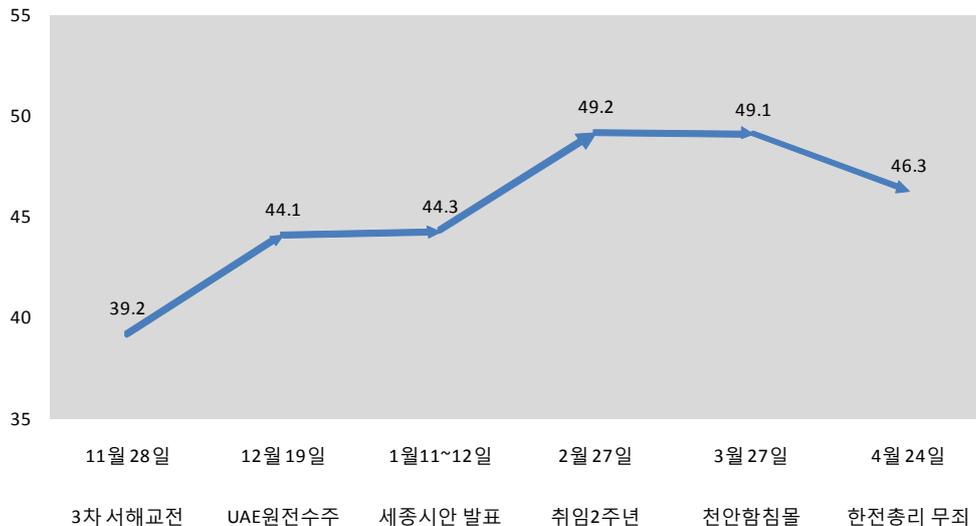
2010년 4월 24일

정한울 · 정원철

### 1. MB 지지율 46.3%, 전월대비 2.8%p 하락

- 안보위기 시 결집효과(Rally around the flag effect)와 정치적 악재 상쇄된 듯

[그림1] 대통령 지지율 변화추이



4월 24일 실시한 EAI · 한국리서치 4월 정기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지지율 진입을 목전에 두고 두 달 연속 주춤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 이후 천안함 사건 진상 파악, 실종자 수색 과정에 전 사회적, 국가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4월 9일 한명숙 전 총리 수뢰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고, 최근 검사 성 접대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는 등 정부여당으로서 악재가 적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은 3월 27일 조사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46.3%로 나타났다. 통계적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발생한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 즉 랠리 어라운드 더 프래그(rally around the flag effect)와 정치적 악재 요인이 서로 상쇄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1] 계층별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잘함	대체로 잘함	①+②	별로 못함	전혀 못함	③+④	모름/ 무응답	계
<b>■ 전 체 ■</b>	<b>(800)</b>	<b>12.1</b>	<b>34.2</b>	<b>46.3</b>	<b>32.7</b>	<b>18.5</b>	<b>51.3</b>	<b>2.5</b>	<b>100.0</b>
<b>성별</b>									
남 자	(395)	13.9	32.4	<b>46.3</b>	29.7	20.7	<b>50.4</b>	3.3	100.0
여 자	(405)	10.4	35.8	<b>46.3</b>	35.7	16.4	<b>52.0</b>	1.7	100.0
<b>연령</b>									
19 - 29 세	(159)	3.3	24.8	<b>28.1</b>	39.3	30.8	<b>70.1</b>	1.8	100.0
30 대	(173)	7.2	25.3	<b>32.5</b>	36.2	29.3	<b>65.5</b>	2.1	100.0
40 대	(181)	9.7	34.7	<b>44.4</b>	35.7	16.1	<b>51.9</b>	3.8	100.0
50 대 이 상	(288)	21.5	44.3	<b>65.8</b>	25.2	6.8	<b>31.9</b>	2.3	100.0
<b>학력</b>									
중 졸 이 하	(83)	19.7	55.2	<b>74.9</b>	16.3	5.3	<b>21.6</b>	3.4	100.0
고 졸	(189)	15.9	34.2	<b>50.1</b>	34.0	13.0	<b>47.0</b>	2.9	100.0
전문대재학이상	(514)	9.8	30.7	<b>40.5</b>	35.0	22.8	<b>57.8</b>	1.7	100.0
모름 / 무응답	(14)	0.0	34.2	<b>34.2</b>	29.5	14.9	<b>44.4</b>	21.4	100.0
<b>직업</b>									
농 / 임 / 어업	(24)	12.4	63.5	<b>75.9</b>	8.2	12.9	<b>21.2</b>	3.0	100.0
자 영 업	(129)	18.0	31.4	<b>49.4</b>	31.8	18.1	<b>49.9</b>	0.8	100.0
판매영업서비스	(61)	9.1	39.3	<b>48.4</b>	32.0	17.9	<b>49.9</b>	1.7	100.0
생산/기능/노무	(37)	13.0	31.8	<b>44.7</b>	23.2	26.9	<b>50.1</b>	5.1	100.0
사무/관리/전문	(220)	9.0	29.0	<b>38.0</b>	34.2	25.2	<b>59.4</b>	2.6	100.0
주 부	(169)	14.0	40.0	<b>54.0</b>	37.2	6.5	<b>43.7</b>	2.3	100.0
학 생	(71)	3.2	25.0	<b>28.2</b>	37.4	34.4	<b>71.8</b>	0.0	100.0
무직기타무응답	(88)	16.6	36.7	<b>53.2</b>	29.4	11.0	<b>40.4</b>	6.3	100.0
<b>가구소득</b>									
100 만원 이 하	(87)	20.8	45.2	<b>66.0</b>	21.6	9.2	<b>30.8</b>	3.2	100.0
101 - 200만원	(127)	15.0	36.2	<b>51.2</b>	25.6	18.9	<b>44.5</b>	4.3	100.0
201 - 300만원	(160)	9.3	31.7	<b>41.0</b>	34.7	21.9	<b>56.6</b>	2.4	100.0
301 - 400만원	(146)	6.8	36.6	<b>43.4</b>	35.5	19.7	<b>55.3</b>	1.3	100.0
401 만원 이 상	(219)	13.6	30.9	<b>44.5</b>	33.9	20.7	<b>54.6</b>	0.9	100.0
기 타 / 무응답	(61)	8.5	26.2	<b>34.8</b>	47.5	11.3	<b>58.8</b>	6.4	100.0
<b>권역</b>									
서 울	(169)	16.6	34.7	<b>51.3</b>	25.7	20.7	<b>46.4</b>	2.3	100.0
인 천 / 경 기	(222)	10.4	35.2	<b>45.6</b>	33.8	18.4	<b>52.2</b>	2.2	100.0
대 전 / 충 청	(81)	8.6	32.6	<b>41.2</b>	43.0	11.3	<b>54.3</b>	4.5	100.0
광 주 / 전 라	(83)	2.4	20.5	<b>22.9</b>	45.3	27.7	<b>73.0</b>	4.2	100.0
대 구 / 경 북	(84)	8.8	47.1	<b>55.8</b>	29.7	13.4	<b>43.0</b>	1.1	100.0
부산/울산/경남	(128)	21.8	31.2	<b>53.0</b>	25.4	19.3	<b>44.7</b>	2.3	100.0
강 원 / 제 주	(33)	4.8	41.2	<b>46.1</b>	41.2	12.7	<b>53.9</b>	0.0	100.0
<b>이념성향</b>									
진 보 (0-4)	(212)	7.7	23.8	<b>31.5</b>	36.7	29.9	<b>66.7</b>	1.8	100.0
중 도 ( 5 )	(303)	13.1	35.1	<b>48.2</b>	32.5	17.4	<b>49.9</b>	1.9	100.0
보 수 (6-10)	(244)	15.2	40.5	<b>55.7</b>	30.7	11.0	<b>41.8</b>	2.6	100.0
모름 / 무응답	(42)	9.7	43.0	<b>52.7</b>	25.6	12.3	<b>37.9</b>	9.4	100.0
<b>정당지지도</b>									
한 나 라 당	(238)	33.9	52.7	<b>86.6</b>	10.1	2.9	<b>13.0</b>	0.4	100.0
민 주 당	(141)	1.5	15.5	<b>17.0</b>	52.4	29.3	<b>81.7</b>	1.3	100.0
자 유 선 진 당	(29)	5.4	38.5	<b>44.0</b>	34.8	18.1	<b>52.9</b>	3.2	100.0
민 주 노 동 당	(43)	0.0	22.7	<b>22.7</b>	24.5	50.4	<b>74.9</b>	2.4	100.0
미래 희망 연대	(5)	0.0	52.9	<b>52.9</b>	29.6	17.5	<b>47.1</b>	0.0	100.0
창 조 한 국 당	(7)	0.0	13.8	<b>13.8</b>	43.5	42.7	<b>86.2</b>	0.0	100.0
진 보 신 당	(6)	0.0	15.5	<b>15.5</b>	17.9	66.6	<b>84.5</b>	0.0	100.0
국 민 참 여 당	(14)	0.0	0.0	<b>0.0</b>	15.2	84.8	<b>100.0</b>	0.0	100.0
평 화 민 주 당	(2)	0.0	44.9	<b>44.9</b>	55.1	0.0	<b>55.1</b>	0.0	100.0
국 민 중 심 연 합	(3)	0.0	0.0	<b>0.0</b>	67.8	32.2	<b>100.0</b>	0.0	100.0
기 타	(93)	2.0	30.3	<b>32.3</b>	48.0	17.4	<b>65.5</b>	2.2	100.0
무 당 파	(219)	5.0	32.5	<b>37.5</b>	40.1	16.5	<b>56.6</b>	6.0	100.0
모름 / 무응답	(19)	10.7	16.1	<b>26.8</b>	39.4	18.4	<b>57.8</b>	15.4	100.0



사회계층별 대통령지지 패턴은 고연령층, 저소득층, 저학력층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기존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 28.1%, 30대에서 32.5%로 전체 지지율 46.3%에 크게 못 미쳤고, 40대에서 44.4%, 50대 이상에서는 65.8%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 층에서 무려 74.9%, 고졸층에서 50.1%, 대재 이상층에서 40.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소득별로 보면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응답자 중에서 66.0%, 100만원대 소득계층에서 51.2%로 저소득층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전체 평균을 넘었다. 반면 200만원대 소득계층에서 41.0%, 300만원대 응답자 중 43.4%, 400만원 이상 응답자 중에서도 44.5%로 중간소득계층 및 고소득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지역별로 대통령 국정에 우호적인 여론은 대구·경북 55.8%, 부산·경남·울산 53.0%, 서울 51.3%, 인천·경기 45.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충청에서 41.2%, 광주·전라 지역에서 22.9%를 기록하여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치성향별로도 스스로 보수로 생각하는 층에서 국정지지율이 높고(55.7%), 진보로 생각하는 층에서 국정지지율이 낮았다(31.5%). 2009년 중도실용주의 등장 이후 이대통령 국정에 대해 우호적 여론이 높아진 중도층에서 48.2%로 전체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정당 지지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86.6%로 높아 지지층의 결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야당에서는 자유선진당 지지층에서 44.0%로,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 22.7% 민주당 지지층에서 17.0%로 낮게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 층에서는 국정지지율이 37.5%로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에 대해 실망하면서도 특정 야당에 대한 지지층이 되지 못하는 층이 무당파층을 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 차기 대통령 지지후보 한명숙 2위 부상

박근혜 23.7% > 한명숙 10.2% > 유시민 8.8% > 정몽준 8.0% 順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문항 :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23.7%로 여전히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한명숙 전총리의 부상이 눈에 띈다. 2월 조사에서 4.5%, 3월 조사에서 6.3%, 이번 4월 조사에서는 10.2%로 본 정기조사에서 처음으로 10%벽을 넘어섰다. 박 전대표 지지도가 2월 조사에서 25.2%, 3월 조사에서 24.2%, 4월 조사에서는 23.7%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다.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가 8.8%, 정몽준 한나라당 당대표가 8.0%로 그 뒤를 이었다. 한명숙 총리가 2위 자리로 올라선 가운데 1강 3중 구도를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1강 3중의 지역별 지지기반

지역별로 보면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박근혜 대표가 앞서가고 있지만 수도권과 호남, 강원 제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충청, 영남권에서 평균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서울 11.9%, 충청 13.7%, 부산경남지역에서 10.4%로 박전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편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



의 경우 호남에서 15.4%로 16.4%의 지지를 받은 정동영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친노바람이 상대적으로 강한 부산경남지역에서 9.7%, 서울에서 11.7%로 각각 박근혜 전대표, 정몽준 대표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대전충청에서는 10.7%로 4위, 대구경북지역에서 6.3%로 3위를 점하고 있다. 유시민 전장관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에서 8.7%로 박근혜 대표에 이어 2위, 강원제주 지역에서 11.2%로 2위에 올랐고, 경인지역에서 8.6%로 3위, 호남에서 10.8%로 3위, 충청권에서 10.8%로 3위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7.7%, 부산경남지역에서도 7.3% 박 전대표, 정몽준 대표, 한명숙 전총리, 오세훈 후보의 뒤를 이어 5위에 위치하고 있다.

[표2] 차기 대선 후보 지지(%)

	4월	3월	2월	전월대비
박근혜	23.7	24.2	25.2	-0.5
한명숙	10.2	6.3	4.5	3.9
유시민	8.8	7.8	7.3	1.0
정몽준	8.0	7.0	7.0	1.0
오세훈	5.1	4.6	4.9	0.5
이회창	4.6	4.3	4.1	0.3
정동영	3.7	5.6	3.8	-1.9
손학규	3.4	2.5	3.3	0.9
김문수	2.1	3.6	2.4	-1.5
정운찬	2.0	1.9	2.4	0.1
정세균	0.7	0.7	1.0	0
다른후보	11.3	5.6	8.1	5.7
모름/ 없음	16.6	25.7	26.0	-9.1

박전대표 대통령 지지층, 한나라당 지지층 결집 약해

민주당 지지층, 진보지지층에서 한명숙 전총리와 유시민 전장관 간 경쟁 심화될 듯

정치적 성향별로 살펴보면 우선 이명박 지지층에서는 순서대로 박전대표가 27.2%, 정몽준 대표가 13.6%, 오세훈 후보가 9.0%, 이회창 대표가 5.2%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부정 응답층에서는 박 전대표가 20.2%로 앞섰고, 한명숙 전총리 15.5%와 유시민 전장관 14.8%이 뒤를 추격하는 양상이다.

정당 지지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의 34.8%가 박근혜 전대표를 지지했고, 정몽준 대표가 19.7%의 지지를 획득했다. 오세훈 후보가 10.8%로 그 다음 순위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0.8%가 한명숙 전총리를 지지해 현재 가장 앞서가고 있다. 유시민 전장관이 15.0%, 박근혜 전대표가 14.5%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적지 않은 지지기반을 과시하고 있다. 특정 정당을 선호하지 않아 정국 변화의 바로미터가 되는 무당파 층에서도 박전대표가 19.6%로 앞서고 있으며 한명숙 전총리가 8.9%로 두 번째였고 유시민 전장관이 7.2%, 손학규 전대표가 5.0% 순이었다.

이념성향별로 봐도 스스로를 보수적이라 생각하는 보수층에서 박전대표가 28.3%의 지지를 받았고, 정몽준 대표가 12.8%,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6.8%의 지지를 받았다. 중도층에서도 역시



박전대표가 23.8%로 1위, 한명숙 전총리 9.1%, 유시민 전장관이 8.8%로 나타났다. 이념적 진보층에서는 박전대표가 20.0%로 18.4%를 얻은 한명숙 전총리를 미세하게 앞서고 있으며, 유시민 전장관이 15.1%로 추격하고 있다.

종합하면 박전대표가 현 지지층은 물론 반대층에서도 고른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앞서나가고 있으며 야권 및 진보진영에서는 최근 무죄판결로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명숙 전총리가 부상하며 앞서가던 유시민 전 장관을 추월한 양상이다. 그러나 한 전총리와 유시민 전 장관의 격차가 크지 않아 이후 지방선거 결과나 향후 정치변동 과정에서 지지기반 확보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다만 박전대표나 야권의 대표주자들 공히 자신의 정당 및 이념적 지지기반을 확고히 대표하는 주자로서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전대표가 상대적으로 나온 상대적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34.8%, 보수층에서 28.3%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거나 아직 선호가 뚜렷하지 않은 층의 태도변화가 충분히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서는 현재 뒤쳐져 있던 한명숙 전총리가 부상하고 유시민 전 장관이 적지 않은 지지기반을 과시하고 있지만 이념적 진보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박전대표와 경쟁을 벌여야 할 정도로 미세한 우세를 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둘의 지지를 합해도 40%를 넘지 않는다.

[표3] 계층별 차기 대선 지지(%)

(단위 : %)

	김문수	박근혜	손학규	오세훈	유시민	이회창	정동영	정몽준	정세균	정운찬	한명숙	다른 후보	모름
<b>전체</b>	<b>2.1</b>	<b>23.7</b>	<b>3.4</b>	<b>5.1</b>	<b>8.8</b>	<b>4.6</b>	<b>3.7</b>	<b>8.0</b>	<b>0.7</b>	<b>2.0</b>	<b>10.2</b>	<b>11.3</b>	<b>16.6</b>
<b>권역</b>													
서울	3.0	18.1	5.1	8.1	7.7	3.9	2.4	11.9	0.6	3.1	11.7	8.2	16.4
경인	4.0	19.4	4.6	5.4	8.6	5.0	3.1	5.4	0.4	3.2	9.1	14.1	17.7
대전/충청	0.0	28.4	1.3	2.4	10.8	8.0	3.3	13.7	0.0	0.0	10.7	8.5	13.0
광주/전라	2.1	4.0	6.0	1.1	10.8	0.0	16.4	4.3	3.2	1.0	15.4	12.3	23.4
대구/경북	0.0	47.8	0.0	2.5	8.7	4.9	0.0	3.3	0.0	0.9	6.3	10.5	15.0
PK	0.8	33.5	0.7	7.5	7.3	4.6	0.7	10.4	0.8	1.5	9.7	12.1	10.6
강원제주	0.0	19.6	3.5	2.6	11.2	7.7	4.4	2.8	0.0	0.0	7.6	10.6	30.1
<b>국정평가</b>													
긍정평가	4.0	27.2	1.8	9.0	2.6	5.2	1.5	13.6	0.8	3.0	4.6	8.8	17.8
부정평가	0.5	20.2	4.6	1.8	14.8	4.2	5.7	3.3	0.4	1.1	15.5	13.8	14.3
<b>이념성향</b>													
진보 (0-4)	1.9	20.0	5.7	5.2	15.1	2.6	3.5	3.4	0.0	1.4	18.4	11.2	11.7
중도 (5)	0.7	23.8	2.9	5.3	8.8	4.8	3.0	7.4	1.2	2.4	9.1	13.3	17.3
보수 (6-10)	4.0	28.3	2.1	4.9	4.3	6.8	4.7	12.7	0.7	2.4	5.3	9.1	14.7
<b>정당지지도</b>													
한나라당	5.3	34.8	0.9	10.8	0.4	5.3	0.5	19.7	0.4	3.5	1.2	3.4	13.8
민주당	0.0	14.5	5.2	2.1	15.0	2.1	15.2	2.9	1.3	0.0	20.8	10.8	10.2
무당파	0.9	19.6	5.0	4.1	7.2	2.3	1.2	3.0	0.8	1.7	8.9	13.1	32.1

## 2. 천안함 사건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현재까지 천안함 침몰사건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이후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는 과정에서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변화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이 사건이 지방선거 국면에 결정적인 변화를 중대사건(critical events)로 보기는 힘들다.

(1) 천안함 사건이 의제설정에 미치는 영향과 (2) 천안함 사건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실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3) 실제 정당 지지율의 변화 등을 종합해본 결과다.

### ■ 의제설정 차원의 영향 : 국민들이 바라는 국정최우선 순위 변화

안보이슈 및 국민통합 이슈 상승/ 경제 양극화 및 성장 이슈 하락  
여전히 경제 양극화 해소(22.8%)와 사회통합(16.2%)이 최우선 과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안보아젠다가 지방선거 국면의 중심으로 떠오를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보수성향의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선, 1월 EAI가 국정최우선 과제를 물어보았을 때 국민들의 관심은 경제양극화 해소 및 성장, 국민통합 및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모이고 있었다. 37.2%가 경제 양극화의 완화를 국정 최우선 순위로 뽑은 반면,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은 21.0%였다. 국민통합이 최우선과제여야 한다는 응답이 13.5%, 삶의 질 개선이라는 응답은 10.0%였다. 정치개혁을 꼽은 응답이 6.1%, 국제경쟁력 강화를 꼽은 응답이 5.8%로 뒤를 이었다. 남북관계를 꼽은 응답(3.2%)이나, 국가안보를 꼽은 응답(1.2%)는 소수에 불과했다.

[표4]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정 최우선 과제 순위 변화 (%)

2010년 1월 12일		4월 24일		순위 변동(비율)
경제양극화 완화	37.2	경제양극화 완화	22.8	동일(14.4%p 하락)
경제성장	21.0	국민통합	16.2	+1 (2.7%p 상승)
국민통합	13.5	경제성장	14.8	-1 (6.2%p 하락)
삶의질 개선	10.0	국가안보 강화	11.8	+5 (10.6%p 상승)
정치개혁	6.1	정치개혁	10.3	동일 (4.2%p 상승)
국제경쟁력 강화	5.8	삶의질 개선	9.4	-2 (0.6%p 하락)
남북관계 개선	3.2	남북관계 개선	6.4	동일 (3.2%p 상승)
기타	1.7	국제경쟁력 강화	5.6	-2 (0.2%p 하락)
국가안보 강화	1.2	모름/무응답	2.0	+1 (1.8%p 상승)
모름/무응답	0.2	기타	0.8	-2 (0.9%p 하락)

그러나 천안함 사건 발발 근 한달이 지난 4월 24일 조사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었다. 경제 양극화 완화를 최우선 과제를 꼽은 응답이 22.8%로 1월 조사에 비해 14.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통합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16.2%로 지난 조사에 비해 2.7%포인트 상승하여 경제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은 1월 조사에 비해 6.2%포인트 하락한 14.8%에 그쳐 세 번째 순위로 내려 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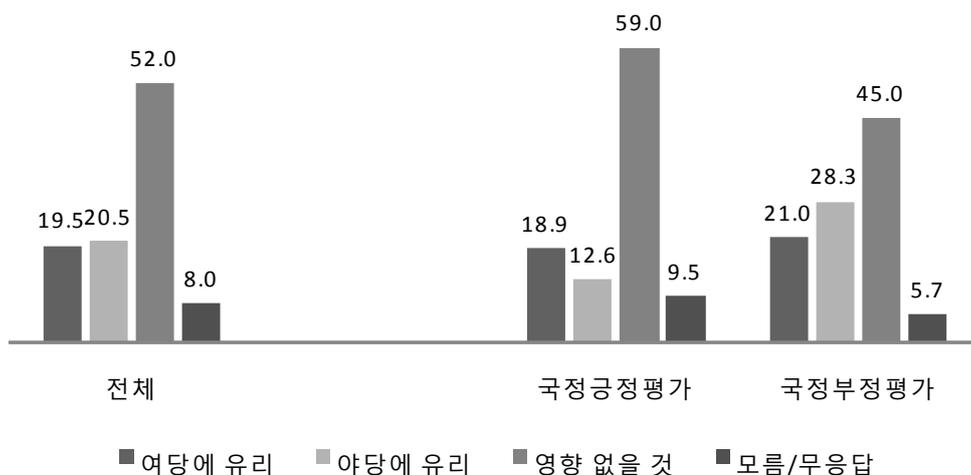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지난 조사에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국가안보를 꼽은 응답이 1.2%로 매우 낮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무려 10.6% 포인트가 상승한 11.8%로 무려 다섯 계단이나 올라섰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크게 상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 의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이 4.2%p 상승한 10.3%로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순위를 지켰고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바라는 응답은 9.4%에 머물러 두 계단 내려 앉았다. 천안함 사건이 후 남북관계 개선을 꼽은 응답도 3.2%p 상승해 6.4%를 기록했지만,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국제경쟁력 강화 의제는 5.6%의 지지를 받아 국민들 인식 속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천안함 사건으로 국가안보 아젠다와 사회통합 아젠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여론이 강화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경제양극화 완화나 경제성장 아젠다를 중시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다. 결국 천안함 사건이 부분적으로 안보아젠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어 그 영향력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여전히 경제 아젠다가 우위를 지킴으로써 근본적인 의제 구조의 변화까지 초래할 것은 아니다.

#### ■ 천안함 사건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별 영향 없을 것” 52.0%, “여당에 유리할 것” 19.5%, “야당에 유리할 것” 20.5%

[그림2] 천안함 사건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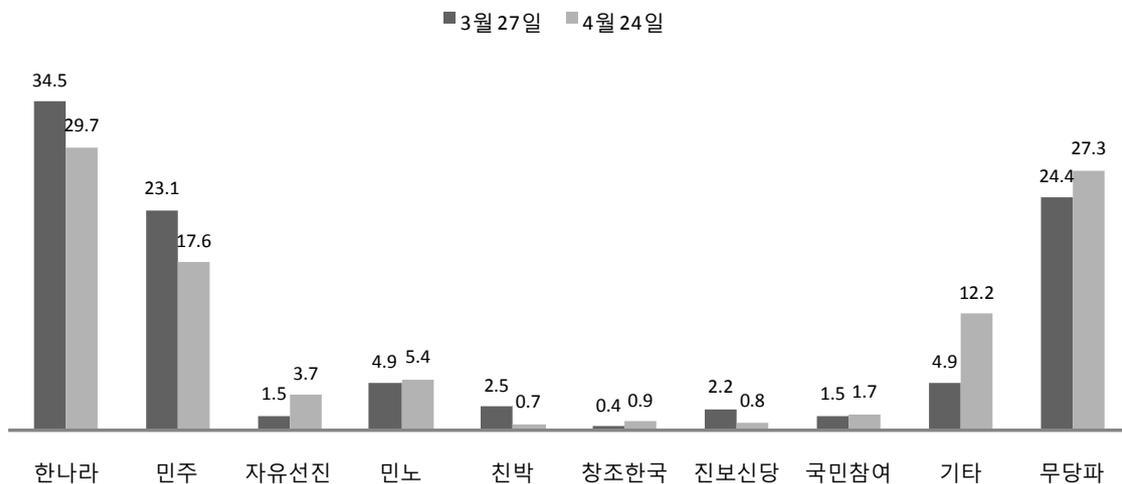


실제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이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물어본 결과를 봐도 이 사건이 당장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별 영향

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2.0%가 과반수를 넘었다.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19.5%, 반대로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 역시 20.5%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61.7%,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5.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통령 지지층에서 59.0%, 대통령 국정예 비관적인 층에서 45.0%로 나타나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집단일수록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고, 야성향의 비관적인 층에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조차 여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는 경향과 야당에 유리한 이슈로 보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 정당지지율: 정국 중심에서 밀려난 한나라당, 민주당 동반하락

[그림3] 정당지지율(%)



지난 달 말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한국사회의 모든 관심이 이 사건에 집중되면서 일상적인 정치 활동 조차도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선부른 정치공세는 역풍이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당간 공방은 그다지 치열하게 전개되지는 않았고 관망하는 분위기였다.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이제야 각 정당의 경선일정이 본격화되면서 후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각 정당이 정국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지도는 동반하락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조사에서 34.5%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 조사에서 29.7%로 4.8%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의 경우도 지난 달 23.1%에서 5.5%포인트 하락한 17.6%로 내려 앉았다. 대신 군소 정당에서는 의미 있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으며 무당파 층이 24.4%에서 27.3%로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양당 지지의 동반하락으로 한나라당 우세의 양당간 정당지지 균형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

## EAI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공동 매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2009년 2월부터 매달 유권자들의 정치사회인식의 분포와 변화를 추적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선호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과정이 필수적이다. 매월 20일 전후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를 통해 민의에 기반을 둔 대의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4월 조사개요

조사일시	4월 24일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표본추출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가중치 부여)
표집오차	95% 신뢰수준 $\pm 3.5\%$
응답율	11.6%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CATI)
조사기획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 <a href="http://www.eai.or.kr">www.eai.or.kr</a>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a href="http://www.hrc.co.kr">www.hrc.co.kr</a> )

### EAI 정기여론조사 연구팀

팀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서상민(EAI 중국연구센터)
	이곤수(EAI 거버넌스센터)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이 보고서는 EAI 여론분석센터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mailto: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mailto: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mailto:cskim@hrc.co.kr))

